

사립대학 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 정책

김 채 옥 한양대 기획조정처장

1. 머리말

1) 대학교육의 대중화

흔히 생산의 3요소로 노동, 자본, 토지를 말한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가 가난을 벗고 경제성장을 위해 유일하게 갖고 있고 또한 갖출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 뿐이었다. 다행히 유교적 뿌리에 바탕을 둔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열은 훌륭한 인적 자원을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과거의 엘리트 교육으로 여겼던 고등교육을 대중화시켰다. 우리나라의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 진학률을 보면 1970년에는 31.9%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에는 83.7%로 높아졌고 4년제 대학 진학률만도 46.1%에 달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빠른 변화는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도 기인하지만 그만큼 사회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이제는 대학교육을 받아야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자아성취의 기회가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적으로도 오늘날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유지해야만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연도별 대학 진학률 (단위: %)

연도	1970	1980	1990	1998
진학률	31.9	44.0	46.0	83.7

※ 자료: 이면영, IMF 시대의 사회경영 「1998년 사립대학 재정관리자 연수」, 사학진흥재단, 1998.5, 16쪽

2) 대학교육의 질적인 변화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 신한국 건설의 명분 아래 개혁의 바람이 사회의 각 분야에 번지면서 대학사회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그 동안 대학 교육이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 왔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 교육의 성장 패러다임을 질적인 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등학령인구의 감소로 2003년이 되면 대학에 진학희망자와 대학정원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대학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둘째는 UR 협상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선진

대학이 각종 형태로 우리의 교육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선진 대학에 교육시장이 쉽게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셋째는 대학교육의 직접적인 인력수요자인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 - 대학에서 불량품을 양산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재교육을 해야만 하는 시간-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나 교육수준은 서울대학교 세계 600위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넷째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동아일보의 대학 정보화평가, 교육부의 교육개혁평가 등 대학에 대한 각 기관들의 평가가 시행되었고, 정부도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언론에서도 대학 관련 기사를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각종 평가결과를 비롯한 기타 대학관련 기사는 대학의 명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으로서도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은 정부 및 대학으로 하여금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의 의지로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만들었다. 각 대학은 경쟁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폭적인 시설 투자 및 교수채용에 나섰으며 그 결과 교육여건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교육체제 면에서도 학부제 도입, 복수전공의 허용, 다양한 입시제도의 시행 등 수요자 중심으로 열린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정부도 교육재정을 대폭 늘려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였고,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다.

2.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

1)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화

대학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지원 예산 중 일반지원사업비 역시 대학의 학생수와 자구노력 정도, 그리고 사업목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대학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큰 증가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매년 40% 이상의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금액상으로도 '94년 4,889억 원이었던 것이 '96년에는 1조 136억 원으로 늘어나 3년 만에 약 2.1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 시기를 보면 정부는 '94년 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면한 교육개혁과제를 검토하여 이듬해 5월 31일 제1차 교육개혁안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도 교육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8년까지 GNP 5%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는 전반적인 교육 관련 예산의 전면적인 증가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일면 정부가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교육개혁과 맞물려 시작된 대학종합평가

<표 2> 연도별 대학지원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연도	'92	'93	'94	'95	'96	'97	'98
일반지원사업		2,748	3,297	4,489	6,274	8,886	10,407	9,547
특수목적지원사업		-	-	400	600	1,250	1,454	1,272
계		2,748	3,297	4,889	6,874	10,136	11,861	10,819
증가율(%)		20.0	48.3	40.6	47.5	16.5	17.0	-9.6

를 비롯한 각종 대학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도 대학에 대한 기존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을 바꾸었다. 즉,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하되 대학의 재정지원을 각종 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유도해 나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재정적으로도 1994년부터는 일반지원사업에 국·공·사립대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자구노력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울러 새로이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사업액 : 400억 원)을 시작하면서 국고를 각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 재정 지원방식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 즉, 국립대학의 운영경비지원, 일반지원사업, 그리고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97년도에는 대학지원 예산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이중 국립대학의 운영경비가 30%, 일반 지원사업비가 60%, 특수목적 지원사업비가 30% 정도로 배분되어 사용되었다. 국립대학의 운영비는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처럼 국회심의의를 거쳐 국립대학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용되지만 나머지 2개의 사업비는 교육부가 일정한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립대학 운영비를 제외한 2가지 사업에 대한 대학 재정 지원방식을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로 '98년 예산의 경우 총 사업비 1조 819억 원 중 일반 지원사업비가

9,547억 원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목적 지원사업비는 약 12%인 1,272억 원이다. 각 사업의 내용 및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 지원사업 : 일반 지원사업은 학술연구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26가지의 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원금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 중 사립대학이 지원 받을 수 있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련된 사업은 자구노력 지원사업과 시설·설비 확충사업이 있다. 1994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자구노력사업은 대학의 자구적 노력에 상응한 교육연구경비 지원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1990년부터 지원되어 온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사업('97년부터 공립대학도 포함시킴)은 대학의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도서관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학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지급하여 왔다. 평가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기본지원, 사업목적지원, 정책유도지원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연도에 따라 그 비율과 항목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평가항목은 '94년에는 10개 이하였다가 '97년에는 15~17개, 현재는 21개 항목으로

〈표 3〉 '97, '98 재정지원 기준 지표

구분 \ 사업	자구노력 지원		시설설비 확충	
	'97	'98	'97	'98
지원대상	국·공·사립		공·사립('96년까지는 사립만 해당)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 16개 사립 : 1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 : 21개 사립 : 2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설비 확충 : 16개 도서관 : 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설비 확충 : 21개 도서관 : 21
평가지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지표(10%) 사업목적(50%) 정책유도(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5%) 사업목적 및 정책유도(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20%) 사업목적(40%) 정책유도(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15%) 사업목적(50%) 정책유도(35%)
대용투자 비율	2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설비 확충 : 50% 이상 도서관 : 1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설비 확충 : 20% 이상 도서관 : 20% 이상

늘어났다. 또 여기에 일부 감산지표를 넣어 전체평점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 참조).

나. 특수목적 지원사업 : 1994년부터 시작된 특수목적 사업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를 지원·육성하거나, 교육개혁이 대학에 보다 빨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사업이다. '98년 현재 사업비 총 예산은 1,272억 원으로 6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지방대학만을 위한 지방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든 대학이 지원하여 선정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반지원사업이 거의 모든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수목적지원사업은 해당사업을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일부 대학에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학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선정 방법은 주로 예비평가를 통해 1차 선정된 대학 혹은 신청대학의 계획서를 받아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와 현지방문 평가를 거친 후, 평가성적 순으로 해당사업의 대학수만큼 선정하여 발표한다. 또 재정지원기간은 사업별로 다른데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지원은 매년마다 평가하여 당해연도만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 연구소 첨단화 지원은 2년간, 다른 4가지 사업은 5년간 지원하되 매년 실사를 통해 실적에 따라 지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문제점

정부의 대학별 차등적 재정적 지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대학 국고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부터이다. 특히 일부 대학만 선발하여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의 종류와 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대학이 국고가 특정대학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고, 국고의 합리적 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대학들의 요청을 담아 1996년 11월에 '대학교육제

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동 건의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의 평가방식을 통한 국고의 차등지원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개혁의 실천을 위해서는 대학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총예산의 75%를 대학의 학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차등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97년 7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각 회원대학에 대학 국고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98년에 '대학재정 국고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대학에 송부하였다. 다음은 동 보고서에서 국고지원방법의 문제점으로 서술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① 대학평가의 공정성이 미흡하다. 대학평가가 물량중심, 외형중심으로 치우쳐 대학의 소재지역 및 특성과 역사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준거로는 부족하다.
- ② 대학선정 및 재정배분 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대학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대학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비공개여서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 특히 대학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선정기준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 ③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이 비체계적이다. 지원사업의 선정과 사업계획 추진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④ 중복적인 대학평가 관련업무로 대학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 ⑤ 대학 내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각종 국고의 지급이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국고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대학에서 국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목적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⑥ 국고의 대응투자 연계가 비현실적이다. 현재의 재정

구조에서는 대응투자액을 맞춰나가기 어렵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는 대응투자액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 ⑦ 대학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학재정 지원액이 상위 10개 대학에 중복 지원되고 있고, 그 금액도 분석대상 국고 기준 총 금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재정 지원 방향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는 인간사회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도 마찬가지로 배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려다 보니 대학마다 자기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가 국고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관련 이해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 시기에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무엇일지를 따져보고 이에 따른 국고 배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정부와 국·사립대학간의 공감대를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고지원을 하면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자.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제성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경제성의 원리를 따른다. 그리고 경제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한계효용이 가장 높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

지원도 이러한 시각에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설립주체를 분리하지 말고 우리 나라 대학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자금의 성격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 원칙이라면 정부의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은 이러한 원칙 외에도 재정의 법률적 성격, 대학교육의 목적 이행 등 본래의 지원 목적을 갖고 운영해야만 하는 자금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학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지원에 대한 당초의 취지는 살려도 국고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재정 지원방법에 대한 시기적 선택의 적절성이다. 이는 마치 금융정책을 시행할 때 통화팽창을 할 것인지 통화긴축을 할 것인지는 그 시기의 경제정책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과 같다. 정부가 재정지원 원칙을 일정하게 정하기보다는 대학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 정부의 대학정책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몇 가지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정부에 바라는 대학 재정지원책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대학교육의 질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교수의 질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수가 마음껏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교수와 교육·연구환경을 만족스럽게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와 비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 따라서 오늘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나라가 대학의 교육에 투입한 비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할 때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최근 우리 나라 대학들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는 요원하고 또한 현재의 사립대학 재정구조로는 교육비 투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고를 확보하여 대학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학의 재정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국·사립대학간 국고지원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모든 대학의 바람은 정부가 교육제정을 늘려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저히 증가시켜 주는 것일 것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대학재정은 많이 늘어났고 사학에 대한 지원도 점차 그 비율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립대학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국고지원은 대단히 불공정하게 느껴진다(〈표 4〉 참조).

〈표 4〉 1995년도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현황

내 용	국 립	사 립
세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	44.10%	3.31%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1,513,530원	153,010원

※ 주 : 1. 세입은 자본 및 부채지출을 제외한 순수 운영수입임.

2. 학생수는 학부생 및 대학원 재학생수임.

※ 자료 : 「대학교육 발전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 5.

전술한 바와 같이 사립대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재원은 일반 지원사업의 일부와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때이다. 그것도 '97년의 경우 일반 지원사업의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사업비는 1,250억 원인 데 반해 국립대학 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는 1,230억 원으로 20억 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전국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수를 비교해 본다면 국립대학 지원과의 차이를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지금처럼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가. 또한 우리 나라 대학 전체를 한 단위로

묶어 볼 때 경제성의 원칙에 합당한가를 놓고 자문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더불어 만일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국고지원도 사립대학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전환적 사고를 가져볼 만하다. 물론 당장은 불가능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투자란 측면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3) 평가를 통한 재정의 차등지원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눈앞에 다가온 위협은 대학 진학인구의 감소이다. 대학의 존립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은 심각하게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학생유치를 위해 타대학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확보,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원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고, 정작 국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에는 국고가 적게 지원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고 지원의 편중현상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최근의 대학의 전향적인 발전노력은 상당 부분 정부의 재정 차등지원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구조조정 및 전환기에 있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정부도 환골탈태하는 정신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을 지속으로 기울이도록 국고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국고 지원방향 및 평가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의 차등지원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앞서 지적한 국고지원의 많은 문제점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평가 및 지원 방향을 더욱 공개적·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고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시 대학의 규모, 설립 시기,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쟁은 비슷한 규모와 수준의 대학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할 때에는 비슷한 규모와 수준의 대학을 그룹으로 묶고, 그 그룹 내에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지원양상도 다양화해야 한다. 대학마다 설립시기, 지역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면 설립초기의 대학은 교육의 기본여건 형성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에는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기보다는 교육 기본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비교적 오랜 전통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에는 그 대학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 방향도 정부 주도로 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청하고 이를 교육부가 조정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또 조정 결과에 따라 국고를 지원한다면 국고지원의 편중현상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평가기준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도 정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고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대학의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고지원금이 대학에 지급되는 시기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대학에서는 정부 회계기간에 맞춰 국고를 서둘러 집행하기에 급급하다. 물론 금액이 확정적이고 국고 지급시기가 일정하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국고사업의 지원결정이 대부분 늦게 이루어지고 국고집행 요구기간이 짧다 보니 대학에서 국고를 집행하거나 대응비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에서도 회계기간이나 사업결과보고 등의 문제가 있을 법하다. 그러나 국고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여유를 갖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고를 지급한 다음에 말까지 대학이 집행할 수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4. 맺음말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생 5명 중 4명은 고등교육을 받을 정도로 양적 팽창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 초반부터 닥쳐온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교육개혁을 요구하였고 이는 곧 대학의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학의 수월성과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였고, 이에 맞춰 대학 재정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왔다. 또한 정부는 교육개혁 및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각종 평가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지원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편중 지원현상과 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 때문에 많은 대학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의 변화기이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방식이 보다 적절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평가

시 대학의 규모, 설립시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지원의 다양성, 경쟁의 형평성, 평가기준의 타당성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정부의 대학재정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립대학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학의 비중이나 역할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더욱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립대학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전환적 사고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도 사립대학 만큼 등록금의 수준을 높인다면 그만큼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대학재정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감안할 때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의 사학기관의 재정구조로는 이러한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학의 부족한 교육비를 충당하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고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금보다 더 여유 있게 국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융통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정**

김재욱

한양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서 기획조정처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위원회 위원, 서울시 지방고시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연구업적평가 우수교수('96년, '97년)로 선정되었으며, '98년에 "Structural properties and interfacial layer formation of Pd films grown on InP substrates" 외 6편의 논문을 SCI에 발표하였다